

기획 |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중국, 북한 핵보유국 추구시 정권교체 모색?



박홍서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원
hongseo@hanmail.net

지난 4월 5일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4월 14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의장성명에 대해 6자회담 참여국들이 의장성명의 주요 구성원임을 문제 삼아 향후 6자회담 불참 및 “자위적 핵억지력” 강화를 천명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지난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긴장수위를 급속히 높이고 있다.

중국, 한반도 비핵화와 무력제재 반대

이러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은 무엇인가? 주지하듯,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군사적 안전보장의 의무를 갖는 동맹국이고 경제적으로도 북한 대외무역의 70%를 차지하는 등 어떤 국가보다 큰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합리적 관심사안의 해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수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인

데, 이것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무력제재 반대’ 두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동맹딜레마’라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동맹국 간에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동맹 상대국으로 인해 제3자와의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되는 상황과 반대로 동맹 상대국이 자국을 배신하는 상황을 동시에 방지해야 하는 딜레마이다. 중국의 대북 딜레마 역시 북한으로 인해 제3자(미국)와의 분쟁에 연루되는 상황과 반대로 북한이 중국의 세력권으로부터 이탈(배신)하는 것을 동시에 방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북한을 지지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근본적인 이유다.

우선 중국은 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지지할 수 없는가? 주지하듯, 개혁·개방기 중국의 최고 국가목표는 ‘하나의 중심(一個中心)’으로 표현되는 경제발전이다.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미국주도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한 대미관계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인이다. 따라서 대미 관계를 일순간에 파국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 한국 및 대만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고시켜 역내 군비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안정적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강력하게 제재하기도 어렵다. 중국에게 북한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지정학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통시적인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임진왜란기, 청일전쟁기, 한국전쟁기, 그리고

1994년 1차 북핵위기시 각각 성격이 다른 중국지도부들이 '순망치한(唇亡齒寒)'의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북·중 동맹 딜레마, 해법없어...관리만 가능

특히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직간접적인 견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주로 중국에 인접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대한 점거 및 우호적 관계를 통한 대중국 포위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침공, 인도, 태국,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 등 전통적 친미 국가들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파키스탄, 베트남,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급속한 관계개선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봉쇄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에게는 전통적 친중 국가인 북한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딜레마에는 근본적 해결책이 없으며 단지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면, 중국의 대북 동맹딜레마 역시 파국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만 가능할 뿐이다. 이렇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인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무력제재 반대'는 대북 동맹딜레마에 대한 중국의 관리책이라 할 수 있다. 즉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벼랑끝 전술로 인한 중국의 분쟁연루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대응이며, 대북 무력제재 반대는 북한의 동맹 이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대북 메시지로써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한 지난 6월 12일 정예수이 주유엔 중국대사가 안보리 회의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획 북한, 사실상 핵보유국?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북·미 간 분쟁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중국의 분쟁연루 가능성이 극도로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대북 무력제재 반대는 미국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로써 미국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와 같다면 미·중관계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 행태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상황변수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은 안정적 대미관계가 필요할 때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한 관리를 시도한다. 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방점이 두어진다면 대북 무력제재 반대를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중국의 이 두 가지 입장은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5월 25일

실 미국이 중국을 북핵문제 해결의 '이익상관자(stake holder)'로 규정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협력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다.

중국, 비공식적 대북압박 강화할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핵문제를 미국의 의도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향후 미·중 간 헤게모니 경쟁 가능성 속에서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결코 무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보다 비공식적인 형식으로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2003년 북핵위기가 발생하였던 중국의 대북 송유관 잠정폐쇄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이 협상카드로서의 핵보유가 아니라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려 할때 중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미국과 대북 '공동통치'를 추구하거나 친중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정권교체까지도 가정할 수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1847호)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북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며 평화적인 문제해결이 최우선임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향후 북한이 협상카드로서의 핵보유가 아니라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려 할 때 중국의 대응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설정한 '최후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중국은 보다 강경한 형태의 대북압박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드러나듯 미국과의 대북공조를 강화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미국과 대북 '공동통치(condominium)'도 추구할 수 있다. 사

또한 극단적으로는 친중적인 정치세력으로서의 정권교체까지도 가정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17세기 초 서광계의 '조선감호론' 및 19세기 말 원세개의 대조선 '직할통치'는 모두 이와 동일한 논리로부터 비롯되었다.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이 반복된다면 그 후과는 온전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이 한반도의 입장에서 분석되고 모색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상당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한반도의 이해관계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기민한 분석과 외교력이 필요한 때다. ■